



격변하는 국제정세와 경제·기술·안보의 중요성

경제기술안보연구원 개원 기념 세미나 기초연설문

(24. 10. 25, 고려대학교 국제관 115호)

김 성 한 (고려대학교 경제기술안보연구원장)

1. 머리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오늘 고려대학교 경제기술안보연구원 개원 세미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특히, 바쁘신 가운데 직접 이곳까지 오셔서 축사를 해주신 임종득 의원님, 왕윤종 국가안보실 차장님, 강인선 외교부 차관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초연설이라 기보다는, 경제기술안보연구원을 맡게 된 제가 이번 기회를 빌려 작금의 국제정세를 평가해 보고, 우리나라가 처한 여러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경제기술안보연구원이 무슨 일을 할 것인지에 관해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

작금의 국제정세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기'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른바 '자유주의 국제질서(liberal international order)'는 미국이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세계

GDP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초강대국으로 등장하면서, 자유 진영의 국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동맹 및 우방국들과 함께 구축한 체제입니다.

자유무역(free trade)을 도모하고, 환율안정과 국제수지 조정을 위한 IMF와 IBRD의 역할을 확대하며, 미국의 리더십과 더불어 UN을 중심으로 한 다자협력이 질서를 구성하는 핵심 요소였습니다.

미국은 압도적 군사력과 자유주의 이념을 바탕으로 이러한 질서를 유지해 왔습니다.

다시 말해, 미국의 동맹 세력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자유무역의 가치를 유엔과 같은 다자주의 국제안보기구, 그리고 IMF, IBRD와 같은 국제금융기구를 통해 구현했던 것입니다.

미국은 자유주의적 국제질서를 지키는 국가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했고, 이에 도전하는 국가는 대가를 치르도록 하면서 질서를 관리했습니다.

이러한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첫 번째 도전은 2001년 9-11 테러였습니다.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뉴욕과 워싱턴이 테러로 인해 엄청난 상처를 입었다는 사실이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위상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게다가 2007년에 발생한 미국발 금융위기는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받치고 있는 미국의 경제력에 대해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였습니다.

무역자유화, 자본자유화, 민영화로 대표되는 '워싱턴 컨센서스'의 대안으로 정부 주도의 점진적 경제개혁, 조화발전, 주권 존중을 핵심으로 하는 '베이징 컨센서스'가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국제사회의 구성원들은 일당독재를 기반으로 국가 주도 자본주의 확산을 도모하는 베이징 컨센서스에 대한 관심을 표명했지만, 워싱턴 컨센서스의 대안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미국 경제가 3년 만에 금융위기에서 신속히 탈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워싱턴 컨센서스는 지속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년을 전후해 아프간과 이라크 군사개입에 지친 미국이 군사력과 경제력에서 상대적 약점을 드러내면서 여타 주요 강대국들의 행동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요 강대국들이 규칙보다는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우선시하고 서로 경쟁하는 양상이 현저하게 나타났습니다.

게다가, 2017년 1월 미국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미국 내부로부터 제기되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은 “미국 내 질서, 평화, 번영이 무너지고 있는데 나라 밖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 미국이 ‘해결사’ 노릇을 하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백인 노동자들과 소규모 기업 및 자영업자들의 마음을 읽어낸 데 기인했습니다.

‘미국 우선주의’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지속가능성을 결정짓는 변수로 등장한 것입니다.

3. 유라시아 지각변동

이러한 가운데 유라시아의 지각변동이 도전을 심화시켰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시작된 유라시아의 위기는 하마스-이스라엘 전쟁과 이스라엘-헤즈볼라, 이스라엘-이란 간 보복의 악순환이 벌어지고 있는 중동지역을 거치며 증폭되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 이란, 중국, 북한 등이 유라시아 질서의 향배를 좌우하는 주요 변수로 등장했습니다.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크림반도를 점령한 직후 국제관계의 최대 화두는 ‘지정학의 귀환(return of geopolitics)’이었습니다.

러시아, 중국, 이란 등이 미국 주도의 ‘자유주의 국제질서’에 순응하기보다는 각자 지정학적 이해에 따라 ‘현상 변경’을 도모할 것으로 예측되었습니다.

결국 러시아는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를 침공했고, 미국과 유럽 주요국들의 적극적인 지원에도 전황은 개선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피로감’을 느끼던 순간에 2023년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판 9-11’로 불리는 대규모 테러 공격을 이스라엘에 가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시작됐고, 하마스의 후견국인 이란과, 숙적 이스라엘, 그리고 이란이 후원하는 레바논의 헤즈볼라와 이스라엘 간에 보복의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지정학적 위기 속에 중국·러시아·이란·북한 등이 전략적으로 연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를 공개 지지하진 않으면서, 살상 무기 대신 드론과 컴퓨터 칩을 지원해 왔습니다.

대신 중국은 러시아로부터 잠수함 소음 억제(silent running) 기술과 지대공, 함대공 미사일 방어체계를 들여와, 미국과 서태평양 지역의 군사 경쟁에서 ‘게임 체인저’를 기대하는 것으로 보

입니다.

그리고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격이 있기 전까지 이란은 외교적으로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 간 수교가 가까워져 중동 평화에 대한 역내 기대감이 높았으나, 이란은 내전 중인 시리아 아사드 정권의 만행에 철저히 눈감고 러시아와 함께 지원을 지속해 역내 신뢰도가 추락하고 있었습니다.

이란은 뒤늦게 사우디와의 관계를 개선함으로써 사우디-이스라엘 수교를 저지하려 했습니다. 하마스도 비슷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수교할 경우, 이스라엘에 대한 하마스의 이슬람 강경투쟁 노선은 설 땅 이 사라질 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1년 이상 하마스 소탕 작전을 벌이고 있지만, 과도한 민간인 살상을 초래해 국제사회의 거센 비난에 직면해 있습니다.

가자지구 내 인도주의적 참상과 더불어 미국의 만류에도 역내 긴장을 극대화하는 이스라엘 네타냐후 정권이 오히려 국제적으로 고립되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마스는 물론 러시아와 이란이 원하던 시나리오가 펼쳐진 것입니다.

미 바이든 행정부가 중동문제에 집중하는 사이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황을 개선하기 위해 북한과의 군사협력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에 대한 포탄과 미사일 지원을 넘어 파병까지 단행했습니다.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재진입 기술을 비롯해, 전략무기 관련 기술이전을 원하기 때문입니다.

궁극적 변수는 중국의 인식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보면서 중국은 상대를 과소평가하면 큰 곤욕을 치른다는 점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 이어 중동에서 무력 충돌이 일어나 미국의 군사적 대응이 분산되는 것을 보면서, 중국은 향후 대만에 무력 통일을 시도할 때 한반도가 현재의 중동처럼 '혼돈 상태'에 있어야 미국의 대응이 분산될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유라시아의 지각변동, 즉 우크라이나-중동-대만-한반도의 연계성에 주목해야 합니다.

미국이 우크라이나 및 중동문제를 제대로 수습하지 못하는 가운데 미국의 차기 행정부가 국제적 리더십을 축소한다면, 유라시아 지각변동은 무질서로 귀착될 것이고, 그 여파는 동북아와 한반도에도 미칠 것입니다.

세계 인구의 65%가 거주하는 인태지역은 세계 GDP의 62%, 무역의 46%, 해상 운송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반도체, 이차전지, AI를 비롯한 미래 전략 산업의 핵심 협력 국가들이 위치한 경제·기술적 역동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이 지역이 번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 자유가 확대되고 평화가 정착되어야 합니다.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해 자유민주적 가치와 세계관을 공유하는 한미일이 중심축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한미일 3국은 지난 해 8월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안보 협력의 새로운 역사의 장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를 넘어 인태 지역의 자유, 평화, 번영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EAS나 APEC과 같은 다자협력(multilateralism)을 제도화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한미일, 한중일 협력과 같이 소다자협력(minilateralism)을 활성화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입니다.

특히, 한미일 협력이 쿼드, 오키스, 파이브 아이즈, 그리고 아세안 등과 협력할 경우, 역내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할 것입니다.

4. 경제안보, 기술안보, 군사안보의 중요성

그러나 미중 전략경쟁이 격화되면서, 우리는 경제가 안보이고, 안보가 경제인 시대에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경제와 안보는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더욱이 미·중 전략경쟁이 첨단기술 확보를 놓고 격화하는 추세입니다.

Jake Sullivan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023년 4월 브루킹스 연구소 연설에서 'small yard, high fence'를 언급한 바 있습니다.

경제안보, 기술안보, 군사안보적 측면에서, 최첨단 기술만큼은 절대로 중국에 넘어가지 않도록, 좁은 마당에 담을 높이 쌓아, 동맹국들과 공조 체제를 확립할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경제(economy), 기술(technology), 안보(security) 간 긴밀한 연계가 국제관계의 전략적 과제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경제, 기술, 안보 관련 국제적 네트워크가 미국과 동맹국 그리고 유사입장국(like-minded countries) 간에 활발히 구축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미 양국은 군사동맹을 넘어 경제안보 협력과 첨단기술 협력을 추구하는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동맹이 더 이상 군사동맹에만 머무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미중 전략경쟁은 1990년대 이래 안정적으로 작동해 오던 글로벌가치사슬(GVC)의 균열을 초래하면서 경제안보 개념을 부각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산업경제와 과학기술이 국가안보에 적응하도록 하기 위해 각국이 법제 구축을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법령 제정과 더불어 후속 조치가 실효성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받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공급망 확보, 인프라 보호, 데이터 보호, 핵심기술 유출방지, 첨단기술 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공감대가 생겼습니다.

경제안보는 국력(national power)과 국부(national wealth)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국가적 자원, 재원, 그리고 시장에 충분히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기존 연구의 출발점인 지정학(geopolitics)을 넘어 지경학(geo-economics)적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으며, 통상·금융·조세·글로벌 산업 공급망 재편 등 각종 경제적 정책 수단을 국가안보 목적으로 활용하는 데 대한 관심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신흥안보 개념이 부상하고 경제안보 이슈가 중요해짐에 따라 각국은 대응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 과학기술을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국들은 '전략기술' 내지는 '신흥기술' 개념의 CET (Critical and Emerging Technologies)를 구체화하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외 주요 경제·과학기술·안보 관련 주요 정책들을 비교해보고, 향후 산업기술 공급

망 변화에 대비하기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국가안보를 확보하기 위해서 경제적 희생을 감수하고라도 경제 및 과학기술 정책을 핵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경제-과학기술-안보 일체화의 시대가 도래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신형안보에 대응하는 국내외 정책들이, 산업기술 공급망의 변화에 영향을 주는 변수로 작용하므로, 이에 대한 연구와 고찰이 향후 국가전략 수립에 있어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기술안보연구원의 설립 배경이자 연구 목표입니다.

경제-과학기술-안보 세 분야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경제와 안보의 관계는 국익을 증진하고 자국에 유리한 지정학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경제적 수단을 사용하는 경제안보 개념으로 집약됩니다.

한편, 기술과 안보의 관계는 '기술지정학(techno-geopolitics)', 즉 기술이 지정학에 영향을 미치고, 지정학이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국제관계로 인해 더욱 밀접해지고 있습니다.

기술과 정치는 고도로 통합되고 있으며, 지정학적 리스크와 국가 간 이해관계의 차이가 기술 개발 그리고 기술 접근성을 위한 국가 간 경쟁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술은 국가주권과 지정학적 지배력에 급속한 변화를 초래하고 있고, 오늘날 핵심기술 공급을 둘러싼 국제관계와 전략적 동맹 결성에도 결정적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한편, 기술과 안보의 상호작용은 기술 경쟁의 심화로 인한 분열과 동시에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 마련이라는 이중적 과제에 당면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미 양국이 군사동맹을 넘어서 경제안보와 기술협력을 포함하는 포괄적 동맹으로 진화하는 것은, 변화하는 국제질서 속에서 양국 간 협력의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지만, 기술과 경제안보 분야에서는 협력만이 아니라 경쟁적 요소도 존재합니다.

한미 양국은 자국의 경제적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무역, 산업 보호, 자국 기업 지원 등의 문제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와 같은 산업에서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보조금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한국의 관련 기업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술을 둘러싼 산업적 이익이나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에서 경쟁적 관계가 형성될 수 있습니다.

경제안보 측면에서도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배터리 등의 글로벌 공급망을 재

편하려고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 기업들이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자국 중심의 요구를 동맹국에게 지나치게 할 경우 갈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이 협력을 강화하려는 이유는 경제안보와 기술 패권 경쟁에서 중국의 추격과 압박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국 간 협력이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양국은 연구 개발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첨단기술 표준을 함께 설정하며, 경제안보에서 상호 의존도를 높이는 등의 협력을 통해 글로벌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한미 양국은 협력과 경쟁 간 균형을 맞추며, 양국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포괄적 동맹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거부할 수 없는 사실은, 바로 첨단 과학기술을 군사적으로 접목해서 활용하는 것이 미래 전쟁의 승패를 결정짓는 요소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전통적으로, 군사전략을 수립하면 그 목표 달성에 필요한 무기와 작전이 개발되는 순서를 따랐습니다.

하지만 최근 첨단 기술력이 빠른 속도로 고도화하면서, 전략과 무기의 역전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첨단무기가 전략변화를 추동하는 독립변수가 된 것입니다.

첨단기술을 접목한 무기의 등장으로 전장의 역학과 전략의 방향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미래전은 초연결, 초융합에 기반을 둔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운용하여, 전 영역 통합작전의 형태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따라서 국방혁신을 도모해야 할 한국으로서는 미래의 '도전요인'을 극복할 '기회요인'으로 첨단 과학기술을 활용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습니다.

5. 맺음말

결론적으로, 경제기술안보연구원,

미중 전략경쟁의 지정학 및 지경학적 실체와 대한민국에 미치는 외교, 산업, 과학기술 및 군사적 영향을 진단하고,

경제-기술-안보 간 긴밀한 연계와 작동 메커니즘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우리의 경제안보, 기술안보, 군사안보를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을 도출하여, 국익 극대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고려대학교를 넘어 국내외 기관과 협업할 준비가 되어 있으니, 여러분의 성원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